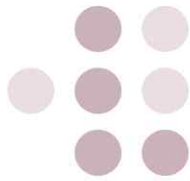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정부부처 정책동향

1.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원 지원 「AX-Sprint」 (관계부처합동) 3
2.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기획예산처) 4
3.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수립 (농림축산식품부) 5
4.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 (보건복지부) 6
5.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 7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 대응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8
7. 국립공원 탐방객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 9
8.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국토교통부) 10
9. '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지방 2곳 글로벌 진출 통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1
10. 지역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교육부) · 12
11.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교육부) 13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6-04호

목 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전북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육성 방안 [전북연구원] 16
2. 전북형 RE100특구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18
3.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19
4.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체계의 현황과 과제: 지방소멸 대응과
노인돌봄체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5. 인공지능 혁명과 공공의 미래, 노동의 전략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1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단가 비교 필요 (교육위원회) 24

I

정부부처

정책동향

관계부처합동

1.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원 지원 「AX-Sprint」

원
바로가기

생활·산업과 밀접한 AI제품 대규모 상용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AX불' 조성

- 정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X-스프린트(AX-Sprint)'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지원
- 이번 계획은 제조, 농축어업, 교통, 의료, 보안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단기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인공지능 응용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
- 총 11개 부처가 협력하여 2026년부터 2년간 약 7,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 해외 인증 및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으로 도우며, 특히 기술 성숙도가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 파격적인 후속 조치를 병행

AX-Sprint (전력질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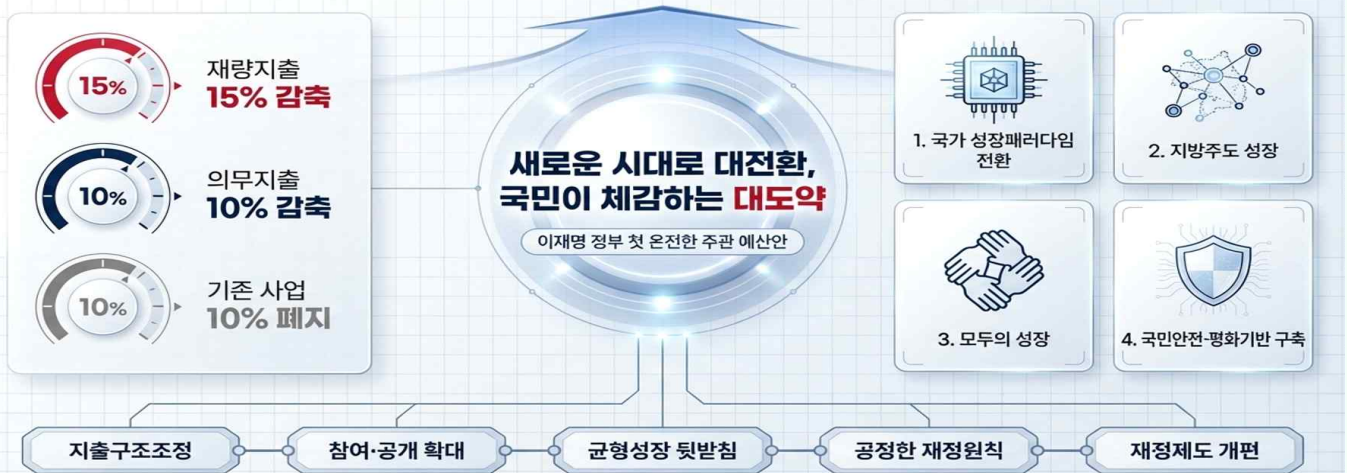


2.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지출구조조정 목표 제시

-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국정성과의 본격화를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예산 구현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 의결·확정
- '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초를 유지하여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
 - * ①지방주도 성장, ②모두의 성장, ③안전 기반, ④문화가 이끄는 성장, ⑤평화 뒷받침
-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미래를 짓는 청사진












농림축산
식품부

3.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원문
바로가기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을 복지 수혜지에서 핵심 경제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대표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권한 강화와 정책 추진 기반 정비
-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협 여성 이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법적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강화 및 농촌 사회의 성평등 기반 확산
- 전담부서·인력 확충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 정책협의체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제고
- 여성농업인의 자립 기반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시간 탄력적 일자리 발굴, 창업·가공 지원, AI·디지털 교육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등을 통해 영농·경영 역량 강화
- 농번기 '틈새돌봄' 도입, 특수건강검진 확대,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건강·안전 지원 확대

기존 방향		제6차 계획 (전환 방향)	
	형식적 참여		‘실질적 지위 향상’ 농협 이사회 여성이사 비율 확대,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개별 사업		‘정책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방·민간 협의체 신설, 전담 부서 강화
	복지 대상		‘핵심 경제주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 추가 개발, AI·디지털 전문 교육
	사각지대		‘맞춤형 복지’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만 80세까지, 8만 명), 농번기 ‘틈새돌봄’ 도입 

8만 명

© NotebookLM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공포
-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개정에 따라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아동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임


한눈에 보는 아동수당 확대 개편 안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지역별 추가 지원 혜택

현행 (변경 전)		개정 (변경 후)	
 8세 미만	대상 연령	 13세 미만	단계적 확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매월 10만 원	지급 금액	매월 10~13만 원 (지역별 차등)	
10만 원	수도권	10만 원 (동일)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	 최대 13만 원 (상품권 수령 시)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
4월 지급분부터 반영, 1월부터 소급 지급

 문자 안내를 통한 간편 신청
변경 없음 시 문자 '1' 회신으로 신청 완료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 안내 문자는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5.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원문
바로가기


정부가 풍황 자원과 환경성을 사전 검토하여 적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전환

- 민간 주도 개별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 및 인허가 일괄 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 속도 제고
- 자원량·환경성 사전검토 및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발전지구'로 직접 지정
- 28개 법령에 산재한 인허가 사항을 범정부 통합 기구를 통해 일괄 처리(의제 처리)함으로써 사업 준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지역경제 기여도와 주민 이익 공유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상생형 모델 확립
- 계획입지 전환을 통해 인허가 리스크를 제거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법적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선제적으로 차단

해상풍력 개발 방식 비교 (기존 vs.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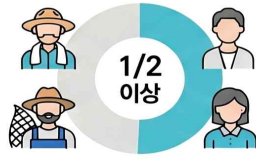
기존 방식 (민간 주도)	개편 방식 (국가 주도 계획입지)
 <p>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발굴</p>	 <p>정부가 선제적 발굴 (예비·발전지구 지정, 풍황·환경 검토)</p>
 <p>사업자가 각 부처별 직접 수행 (복잡한 개별 인허가)</p>	 <p>범정부 통합 기구에서 일괄 처리 (42개 인허가 원스톱)</p>
<p>사업자-주민 간 개별 협의</p>	 <p>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운영</p>

지역 상생을 위한 주민 수용성 강화




민관협의회 운영 의무화

지자체 주도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업인·주민 대표 참여 '1/2 이상' 의무화

협의회 구성 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이 반드시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및 이익 공유

환경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듭니다.

© NotebookLM

기후에너지
환경부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 대응 지원

원문
바로가기

EU CBAM 확정기간(2026년) 본격 시행에 따른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및 기업의 제도 이행 절차 안내 등 밀착 지원 병행 추진

- CBAM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및 대응 필요성 확대
- 2026년부터 CBAM 확정기간 시행으로 EU 수입품에 대한 탄소비용이 인증서 형태로 부과되며, 해당 비용이 국내 수출기업에 전가되어 부담이 현실화
- 배출량 산정·검증, 인증서 구매·제출 등 이행 절차의 복잡성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실무 지원 필요성 증대
-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인증서 절차, 배출량 산정·검증 방법, 제출 기준 완화 등 이행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공
- 1대1 현장 상담, 설명회 확대,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밀착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 대응 역량 제고

2026년 확정기간 시행: 단순 '보고'에서 '비용 부담(인증서 구매)'으로 전환

	전환기간 ('23.10~'25.12)	확정기간 ('26.1~)
주요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인증서 구매 배출량 보고 + 인증서 구매('27~)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  기존 6개 + 하류 산업 확대('28~)
핵심 대응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확보	 정확한 인증서 수량 산정 및 경제성 판단

정부 지원책 한눈에 보기



**실무 매뉴얼로
인증서 수량 산정**

배출량 산정 사례와 인증서 수량 산정법(배산인수)이 담긴 안내서를 산업부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10개 사업장을
밀착 컨설팅 신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전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기업 포함)



**4월 26일까지
집중 모집**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EU CBAM 헬프데스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상담창구 운영

한국환경공단 헬프데스크(내선 1번)를 통해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문 상담을 상시 제공합니다. (1551-3213)

NotebookLM

지역소비 연간 3조 5천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 국토교통부의 국립공원 탐방객 분석 결과 국립공원 방문객은 약 4,300만명, 체류 기간이 늘수록 지역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소비 연간 3조 5천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 포함 15개 국립공원에선 약 1조 6,800억 원 소비 발생
- 탐방객의 체류 형태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방문객 가운데 약 60% 정도는 당일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0% 정도는 숙박을 하며 머물렀고, 특히 숙박형 방문 가운데에서는 1박 2일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음

ECONOMIC TOPOGRAPHY

경제적 파급효과 계단: 체류 기간 증가의 승수 효과 (Economic Multiplier Staircase)

체류 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지역 숙박, 음식, 관광 등 산업 전반으로 소비의 스펙트럼이 확장됩니다.



국토교통부

8.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원
바로가기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 드론 상용화 지원 19개 기업·컨소 선정하고,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됨
-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
-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K-드론, 국산 기술로 날아오르다

30개 지자체와 함께하는 '드론 실증도시'



K-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섬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객을 위한 드론 배송을 25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순찰, 산불·해양 감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안전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

드론 축구와 레이싱 등 K-드론 스포츠의 국제 대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핵심 부품 및 기술의 자립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과 충돌방지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19개 기업과 함께하는 '드론 기술 국산화'



5대 분야 국산 드론 완성체 개발

소방, 항공안전, 물류, 농업, 시설관리 특화 드론의 독자 개발을 추진합니다.

주요 기술 목표 및 성과

- 부품 국산화**
고소용 모터 5종 및 드론용 배터리 5종 개발
- 핵심 기술**
실시간 자율 항법 및 전파교란(항재밍) 대응 기술
- 시설 관리**
시가반 교량 미세 균열 탐지 및 점검 시간 50% 단축

중소벤처
기업부

9. '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지방 2곳 글로벌 진출 통합 지원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에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체험·마케팅·수출지원을 통합하여 글로벌 진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

- K-뷰티의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수출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거점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역 상권과 관광·문화 자원을 연계한 수출 거점 부재로 중소·인디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가 분산된 한계 존재
-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체험·홍보·비즈니스 기능을 결합한 K-뷰티 거점을 조성하여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
- 수출지원, 문화·관광 연계, 규제 대응, 기술·인력 지원 등을 통합한 민관 협력형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

'2026 K-뷰티 글로벌 수출 거점 조성 사업 공고'

지원 규모	글로벌 전초기지	협력 거버넌스	접수 및 선정
<p> 2 개 지역 시범 선정</p> <p> 30 억 원 지원</p> <p>2026년 시범 운영 후 2030년까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p>	<p>중소·인디 브랜드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p> <p>핵심 상권에 홍보·체험·바이어 상담 공간을 구축하여 해외 진출을 촉진합니다.</p>	<p>범정부 원팀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p> <p>중기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마케팅부터 규제 대응까지 통합 지원합니다.</p>	<p>5월 14일까지 '판판대로' 온라인 접수</p> <p>참여 의향서 제출 후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7월 중 최종 지역을 선정합니다.</p>

© NotebookLM

교육부

10. 지역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



5극 3특 초광역 단위의 협력과 엄격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취업 지원

- 기존의 '라이즈(RISE)' 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 분배**
- 지역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취업보장 계약학과, 장기 직무 실습(인턴십),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핵심 과제에 집중**
- 개별 지자체의 칸막이를 넘어 2,000억 원 규모의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및 산학 협력 모델**'을 추진하여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 핵심 인재를 양성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의 대전환

라이즈(RISE)에서 앵커(Anchor) 체계로의 고도화,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2025)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Anchor, 2026~)
정책 명칭	라이즈 (RISE)	앵커 (Anchor)
추진 목표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체계 출범	지역 정주 인재 양성 및 균형발전
지원 예산	1.94조 원	2.14조 원 (약 2,000억 증액)
지원 단위	17개 시·도 개별 추진	17개 시·도 + 5극3특 초광역 협력
운영 중점	지자체 자율 과제 발굴	학생 중심 지원 및 엄정한 성과 환류
핵심 모델	시·도별 시그니처 과제	5극3특 공유대학 및 성장엔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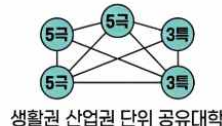
2.14조 원의 과감한 투자와 성과 환류



4,000억 원 규모의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통해 '나눠먹기'식 배분을 타파하고 우수 지역에 집중 지원합니다.



5극3특 초광역 협력 및 성장엔진 육성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산업권 단위(5극3특)의 공유대학과 전략산업 인재양성 모델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교육부

II.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시장의 정상화 및 공교육 강화

- 교육부는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 저해와 정서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함
- 교육부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향후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 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아이의 성장을 지키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유해한 사교육 관행 전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벨테스트(입학시험) 금지 ●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합니다.
 불법 행위 시 매출액 50%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상향 ● 신고 포상금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입니다.
 더 든든해지는 영유아 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초등 이음교육과 독서교육을 확대 ● 수요 맞춤형 틈새 돌봄 운영을 강화합니다.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대·허위 광고 규제를 상담 단계까지 확대 ● 뇌과학 기반의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전북연구원

1. 전북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육성 방안

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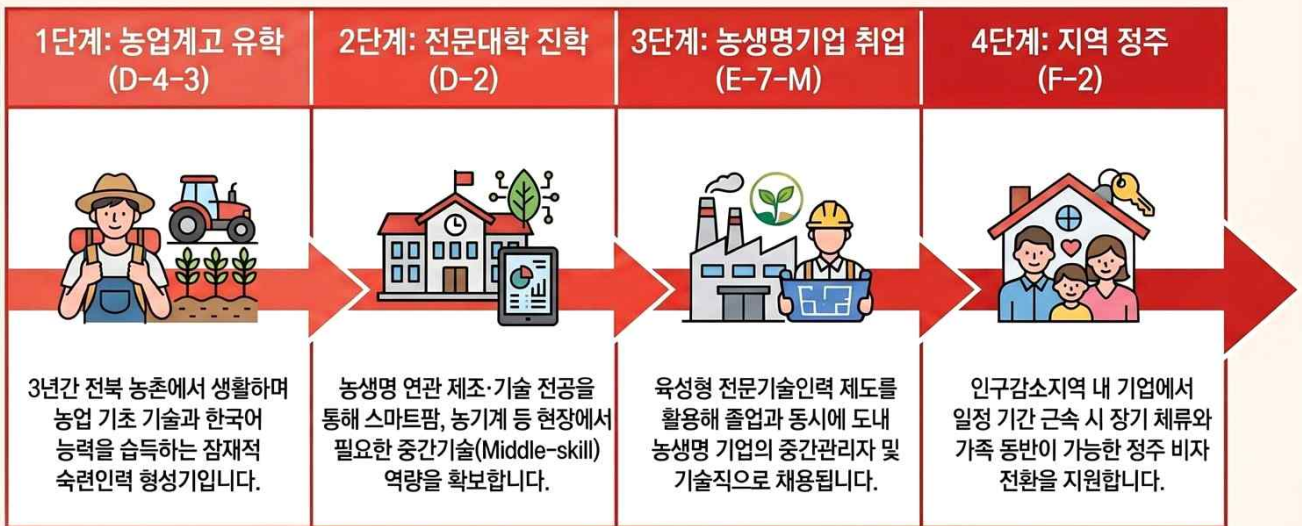
E-7-M 비자와 전문대학 연계를 활용한 전북형 인력경로 설계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고령화·청년 유출로 **중간기술 기반의 농업 숙련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기존 외국인력 제도(E-8, E-9)는 단기·단순노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 역량과 정주를 전제로 하는 농생명 현장 인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움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학생 수 감소 대응과 지역 인구·인력 유입을 목표로 하나, 졸업 이후 진로·비자·정주 경로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낮음
-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연계성이 낮은 학과 중심의 유학생 유치는 졸업 후 귀국 가능성이 높아, 도의 교육·생활 지원 투자가 농생명산업 인력난 및 농촌 정주 문제 해소에 환류되지 못할 우려가 큼
- 반면, **전북 전략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학생들은 전북 농촌에서 3년 이상 생활하며 농업 기초, 현장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축적해 잠재적 농업 숙련인력 풀로 성장할 수 있음
- 여기에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를 결합하면**, 농업계고(D-4-3) →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 →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 → 인구 감소지역 근속 기반(F-2) 정주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정주형 인력 패스웨이 설계가 가능함**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연계한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농생명기업(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 중심의 E-7-M 활용 확대, 전북특별법·조례 기반의 정착지원 패키지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정주 패스웨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끊김 없는 4단계 정주 경로 설계

전북연구원

2. 전북형 RE100특구 도입방안 연구

문
바로가기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특구를 조성하고, 에너지 생산과 기업 수요를 연계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

-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RE100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으나,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대비 산업 수요와 기업 유치 연계가 미흡
-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지만 생산-소비 연계 구조가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적 활용 한계 존재
- 재생에너지 공급, 산업입지, 수출기업 유치를 연계한 RE100특구를 통해 에너지-산업 결합형 성장모델 구축 필요
-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필요

전북형 RE100특구: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미래를 열다

전북의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역량과 기업 맞춤형 5대 특구 모델을 한눈에 파악한다.



태양광 발전량 전국 2위
2위 ↑ 전북,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독보적
(5,534GWh)



바이오매스 발전 전국 1위
1위 ↑ 전북,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독보적
(4,348GWh)

전북형 RE100 5대 세부 모델 (맞춤형 전략)

모델명	핵심 내용	대상 산업/지역
이차전지 특화형	탄소발자국 규제 대응 클러스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AI 데이터센터형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 및 분산에너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 주력산업형	에너지 다소비 식품 기업 맞춤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산단 구조고도화형	모빌리티 공급망 RE100 전환 지원	군산·익산·완주·전주 산단
글로벌 협력형	한-중 공동 개발 글로벌 플랫폼	새만금 한중협력단지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



특례 요금제 적용
(RE100 이행 기업)



송전선로 건설 회피에 따른
공익성 보조금 직접 지급



79.7% 전문가 “신규 산단 중심 추진” 선호



설문 결과: 안정적인 계통 확보와 신규 산업단지를 활용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핵심 성공 요인

NotebookLM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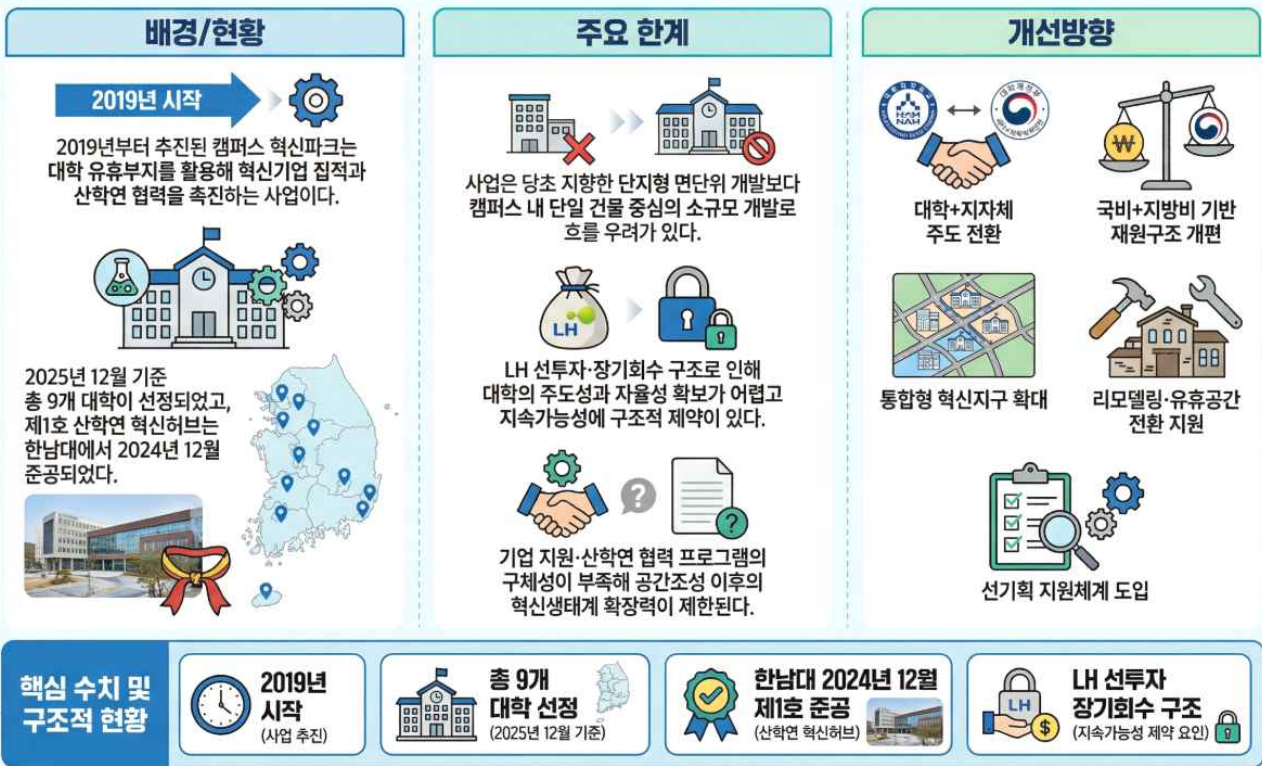
3.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현주소와 개선방안

원문
바로가기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정책 개선 방안으로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구체화 필요하며,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대학부지 내부에 한정된 개발과 LH 선투자를 전제로 한 현행 사업 틀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성장 거점, 그러나 단지형 개발과 지속가능성 제고가 시급한 시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4. 소멸위험지역 노인돌봄체계의 현황과 과제

지방소멸 대응과 중앙정부 노인돌봄체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소멸위험지역 노인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기존 중앙집중적 노인돌봄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졌으나, 소멸위험지역은 인프라 부족과 인구감소·고령화로 돌봄권 보장 미흡
-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정책으로 지역 간 돌봄 수요·자원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노인돌봄 대응 부족
- 도시 편중된 인프라와 돌봄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교통비 기준 개선 및 디지털 돌봄 확대, 인력 확보 및 활용 유연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돌봄체계로 전환 필요

지방소멸 시대, 노인돌봄의 새로운 생존 전략

핵심: 공급 확대가 아닌 '구조적 전환'

문제점 (CURRENT PROBLEMS)	해결책 (SOLUTIONS)
<p>수요와 자원의 심각한 '공간적 불일치'</p> <p>인프라 과잉 공급 돌봄 인력/기초 인프라 부족</p>	<p>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소멸 진행 지역</p> <p>효율적 돌봄 시스템 구축 (맞춤형)</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험 높은 지역</p> <p>예방적 돌봄 강화</p> </div> </div>
<p>면(面) 지역 기관 26.4%, 인력 수급난</p> <p>26.4%</p> <p>서비스 접근성 (낮음) 인력 (부족)</p> <p>낮은 접근성 & 인력 부족, 돌봄권 위협</p>	<p>기술(ICT)과 마을 공동체의 결합</p> <p>AIoT 건강관리 + 스마트 경로당 + 마을 단위 중간지원조직</p>

© NotebookLM

사회공공연구원

5. 인공지능 혁명과 공공의 미래, 노동의 전략 연구

원문 바로가기

- AI를 확률적 계산기계로 객관적으로 보되 기술 자체의 문제보다 거대 독점 기업이 AI를 지배하는 생산관계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진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독자적인 시각임
- AI가 인류의 공공재임에도 소수 글로벌 독점기업(구글·MS·아마존 등)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AI 산업 자체의 민주적·공공적 통제를 위한 사회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AI 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기를 넘어 공공성으로

AI는 '디지털 공공재'이나, 이윤 독점으로 '디지털 인클로저' 현상 발생. 노동권 침해를 막고 감시를 넘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AI 도입 3대 핵심 위기



노동조합 3대 대응 전략



III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1.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단가 비교 필요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비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으로 9억 9,900만 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사업으로 1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10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부처별 1kW당 단가 차이가 큼
- 교육부 소관 사업의 단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비 약 2배가량 높아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논의 및 확인이 필요함

태양광 설비 예산, 교육부만 왜 2.2배 비싼가?

구분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장가
 설치 단가 (1kW당)	333만 원 1kW당 단가	150만 원 1kW당 단가
 학교당 설치 비용 (100kW 기준)	3.33억 원 100kW 동일 용량 산출	1.5억 원 100kW 동일 용량 산출
 시장 평균가 비교 (vs. 조달청 220만 원)	매우 높음 조달청 평균 대비	시장가 수준 조달청 평균 (220만 원)